

제34차 젠더와 입법포럼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 ~ X) **10년의 성과와 과제들**

일시: 2022. **11. 29.**(화) 14:00~17:00

발표 및 토론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제34차 젠더와 입법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원에서 2013년부터 수행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성·가족 관련 법률은 많은 발전과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꾸준히 제·개정되어 법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다양한 법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의 제·개정만 마련, 외국 입법례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이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안했고,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률과 현실과의 간극을 줄여 나가고, 실질적으로 규범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나 스토킹 범죄 처벌과 같은 여성·가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공헌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에도 일조하였습니다.

10년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올해는 헌법의 성인지적 개정 방안을 세부 주제로 연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성평등 정책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헌법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이 여성·가족 법제연구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충실히 하고, 본원의 위상과 전문성, 정책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기획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익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김은희 젠더 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님,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님, 한지영 본원 객원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본 연구의 전문가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오랜 기간 수고하신 박선영 선임연구위원님을 비롯한 박복순 선임연구위원님, 구미영 연구위원님, 송효진 연구위원님, 김정혜 부연구위원님 등 본원의 법제 연구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 유 경**

프로그램

개회식

개회사 :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발 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Ⅹ), 10년의 성과와 과제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토론1]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토론2]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토론3]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4]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5] 한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목 차

발표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Ⅹ), 10년의 성과와 과제들 1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37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39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41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43
한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45

| 발표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Ⅹ),
10년의 성과와 과제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 기획 의도 및 목적

본 연구가 기획된 2013년 당시,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성불평등 수준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

“135개국 가운데 111위로 2012년 108위보다 세 단계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교육(0.959), 보건(0.973) 분야에서는 평등지수가 높았지만, 경제적 참여 및 기회(0.504), 정치권력 분산(0.105)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성격차 지수 0.635를 기록했다. 낮은 성격차 지수도 문제지만, 보다 큰 문제는 성불평등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15위까지 추락했다가 2012년 108위로 회복되었으나 다시 111위로 떨어졌다(박선영 외, 2013: 3).”

그동안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 법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률 내용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성별 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는 없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10년간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마련과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목적 속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세 개의 연구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률 중 현안이 되는 법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법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 주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는 것을 통한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상의 연구결과와 본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 중 입법화가 가능한 제언 등을 토대로 여성·가족 관련 입법 과제를 마련하는 연구이다.¹⁾

이러한 기획 의도에 맞춰 <부록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0년간 노동법, 사회보장관계법, 정치관계법, 가족법, 형법 등 여성·가족 관련 다양한 법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제안 및 『젠더와 입법포럼』을 통해 정책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 3차년도(2013년-2015년)까지는 심층분석, 외국의 입법례 분석,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별개로 구성하여 수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하나의 주제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제안을 위해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행하였다. 다만, 2016년은 제20대 국회 구성 시기에 맞춰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별개의 과제로 다루었으며, 이후에는 본원의 수시과제를 통해 국회 구성 주기에 대응한 입법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박복순 외 (2020).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보고서 참조.

〈표 1〉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도별 세부 연구 주제

연도	세부 연구 주제
2013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4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5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6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7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2018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2019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2020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202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2	헌법의 성인지적 개정 방안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10년간의 연구 내용과 정책제언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 후에 본 과제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2. 10년간의 연구 내용과 정책제언

가. 1차년도(2013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 :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 연구 목적

1차년도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의제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의제인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문제에 주목하여 법제 현황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선영 외, 2013: 4-5).

3)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낙태 규제 관련 법제 심층분석, 정치·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로 구성하였다.

가) 낙태 규제 관련 법제 심층분석

①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낙태 현황, 낙태 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낙태 규제의 방향성과 규제 범위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② 낙태 실태 조사와 범죄 분석 자료를 통해 실제로 발생하는 낙태 시술의 정도와 규제의 현실을 분석함으로써 낙태 규제법의 규범력을 파악하였다.

③ 낙태 규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론을 검토하였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난해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봄으로써 낙태 규제법에 대한 논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④ 낙태 규제의 국제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낙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기한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 등 각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낙태 규제 방식, 낙태 허용 또는 금지 범위를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행 낙태 규제 법제에 대한 입법과제를 낙태 현실과 규범의식 간의 괴리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나) 정치·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①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을 최근 자료를 통해 살펴본 후 각국의 입법례를 후보자 할당 관련 입법례, 의석 할당제 관련 입법례, 정당 할당제 관련 당헌·당규례, 동수제도 관련 입법례를 대상 국가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② 경제 분야의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을 최근 자료를 통해 살펴본 후에 EU 회원국과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국가 중 여성 임원 할당제를 입법화한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다)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본원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 중 입법화가 가능한 제언과 제19대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인 입법안뿐만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 제안되었다가 폐기된 법률안, 그리고 의안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나 법률전문가 단체에서 주장하였던 입법안을 분석·검토하여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마련하였다.

4) 정책제언

가) 낙태 규제 관련

부모의 사유 외에 태아의 기형이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학적 사유에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는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모자보건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윤리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모자보건법」 ‘모체의 건강’은 해석상 이견이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미성년 임부의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 허용, 성폭력 사유 확인 절차 마련, 낙태 허용 기간을 수정하고 배우자의 동의 요건은 삭제함이 타당하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 여성의 대표성 확대

- ①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서는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성별 할당제를 입법화한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었고, 민간부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법에 의한 성별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 등의 제재 조치와 함께 이행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①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련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제고를 위해서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여성추천보조금 금액을 확대(현행 유권자 1인당 100원 → 200원)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임원 구성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특정 성(性)이 일정 비율 이상(최소 70%)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 ② 가족 관련 입법과제로는 부성주의 폐지, 친양자 요건에서 비혼자에 대한 차별 제거, 파양시 성·본 변경 조항 개정,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 보장, 협의이혼제도 개선을 위해 「민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친족관계의 충실한 공시기능과 동시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
- ③ 여성 노동·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권 강화 등을 위해

서는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만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어 출산 후 일단 복귀하여 계약갱신이나 정규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실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효성 제고, 성희롱 구제의 실효성 제고, 돌봄노동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소멸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④ 아동·여성 폭력 관련 입법과제로는 가정폭력 현장 응급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죄의 고지명령 대상 포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제도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⑤ 여성재생산 관련 입법과제로는 낙태 허용 사유의 수정, 성폭력 사유 확인 절차의 마련, 낙태 허용 기한 조정, 배우자 동의 요건 삭제, 상담 절차 마련 등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⑥ 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입법과제로는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과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나. 2차년도(2014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 연구 목적(주제 선정 이유)

2차년도 연구는 주로 가족 관련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과 출생등록의무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에 최근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스토킹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조사·분석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다(박선영 외, 2014a: 3).

이 연구는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및 2014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분석의 대상으로 간통죄를 선정한 것은 간통죄가 형법상의 범죄 중 그 존폐가 가장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간통죄의 존폐는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박선영 외, 2014a: 3).

외국의 입법례 분석대상을 출생등록의무자와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례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체계의 문제점인 신고 누락과 허위 신고, 불법·탈법적인 입양과 영아 유기, 영아 매매 등의 아동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선영 외, 2014a: 3-4).

그리고 스토킹을 외국의 입법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스토킹을 방치할 경우,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박선영 외, 2014a: 4).

3) 주요 연구 내용

가)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간통죄 연혁과 현행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하고, 간통죄에 대한 일반인 조사 분석과 간통 사건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나)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유형,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유형,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법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출생신고 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을 모색하였다.

다)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외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각국 입법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방식, 스토킹 행위의 예시 내용, 피해의 결과, 주관적 구성요건, 친고죄 여부, 형량의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논의뿐만 아니라, 근래 주목받고 있는 피해 예방 정책 등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 하였다.

4) 정책제언

가)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간통은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는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서 그 자체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그로 인한 가정파탄 등은 파생적인 위험 가능성에 불과하다. 또한 간통죄의

일반예방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친고죄이며 이혼을 요건으로 하는 간통죄는 가정보호의 실효성과 상반되며,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보호 기능은 그 근거로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형사처벌이라는 응보적 방식보다 손해보전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 양육권상 이익, 손해배상 등 간통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통해 민법 영역에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나)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출생등록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이 관여하는 출생 자동 등록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통보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규정하여 출생 사실을 즉시 등록하게 하는 신속성, 미등록 또는 누락 및 허위 신고 방지, 의료기관에 의한 통보 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출생신고 기간을 부여하여 출산 직후 산모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한편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입법례의 경우 부담과 저항을 줄이면서 출생등록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출생신고를 그 부모 등에게만 맡겨놓은 국가들이 같은 동북아시아권이라는 점은 신분등록에 있어서 전근대성의 탈피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생등록 신고의무자를 부모 등으로 한 유형이면서 전산망을 통해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한 싱가포르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출생 후 3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통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다) 스토킹 규제 관련

스토킹 처벌 규정을 일반 형법으로 도입하든 특별법에 마련하든 이와 별도로 피해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토킹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평온 혹은 자유 일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형법 개정의 어려움과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안을 마련하여 법의 목적, 스토킹의 정의, 행위 태양, 처벌 특례, 응급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비밀누설 금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 스토킹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 3차년도(2015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 연구 목적(주제 선정 이유)

3차년도는 사회보장법 영역을 중심으로 심층분석과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진행하며,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법 영역을 대영역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법 관련 입법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사회보장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젠더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정책설계 및 집행,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현행 사회보장법제의 성별 적용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각 사회보장법의 입법목적과 체계에 부합함과 동시에 젠더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사회보장법 영역에는 수많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도입 당시 젠더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제도로써 국민연금법상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심층분석 주제로 선정하였다(박복순 외, 2015a: 5).

외국의 입법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구도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세부 주제로 선정하였다(박복순 외, 2015a: 6).

3) 주요 연구 내용

가)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저출산 대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따라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를 출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인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할지 제도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한 후, 양육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효과와 외국의 연구 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의 효과 인식과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현행 고용보험법제는 가입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시간제 근로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이 설정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저임금으로 인해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실태와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법제를 검토하였다.

다)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지난 3년간 제안되었던 입법과제를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사회보장, 가족, 여성폭력,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건강 등 6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입법과제를 검토하였다.

4) 정책제언

가)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출산을 제고보다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 관점으로 접근하고, 급여인정수준 향상보다 인정기간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출산크레딧의 대상인 젊은 층에게 혜택을 인지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의 첫째 자녀 적용, 양육크레딧 추가 도입, 크레딧의 여성 우선 적용 기본 설정(default), 법정 모성휴가기간(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원부담을 명시하고 크레딧 적용 시점을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현행 방식으로부터 크레딧 제공요인 발생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나)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강화 방안

정규직 또는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비되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관련 교육과 안내·지도의 강화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홍보 등 고용보험 내 사각지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간합산제(복수의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시간 초과시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또는 수급자격 인정)의 도입을 제안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한편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 및 정책은 전일제 고용을 모델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의 부분실업 개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실업을 법률상 실업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5년에 제안한 각 영역의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과 태아검진 시간 등의 개선,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호,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등을 제안하였다.

②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개념 변경,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업의 적용 대상 확대, 임신 중 산업재해 모성 급여 지급, 근로자의 고용보험 접근성 강화,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③ 가족 영역에서는 장래의 퇴직금 도는 퇴직연금 분할 허용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 등 연금분할 관련 규정의 개정, 간통죄 폐지 이후 정책적·법적 대응방안 모색, 친생추정 규정의 정비, 사회적 양육의 강화를 위한 법적 기틀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④ 여성폭력 영역에서는 친족간 폭력 범죄 구조금 지급 조항 신설, 성폭력 범죄 합의 강요 처벌 조항 신설,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시의 제재조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⑤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후 관계 법령의 정비로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성 인지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⑥ 여성 건강 영역에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라. 4차년도(2016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V) :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 연구 목적

4차년도 연구는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과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화 등에 따라 근로자의 가족돌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돌봄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돌봄책임과 역할은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육아 이외의 돌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검토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돌봄제공자가 일·돌봄 양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파악한 후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종합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선영 외, 2016a: 15).

3) 주요 연구 내용

① 가족돌봄휴직제도 관련 심층분석에서는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 현황 및 돌봄휴직 이용 현황과 남녀 임금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경험과 인식조사, 외국의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②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에서는 2016년은 제19대 국회를 마감하고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해로서,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를 되돌아보고, 제20대 국회의 여성을 둘러싼 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하였다.

4) 정책제언

가) 가족 돌봄 휴직제도 개선방안

①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급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급여 지급 여부와 그 수준이 각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점은 가족돌봄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득보장 방안을 사업주 부담 또는 개별 사업자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후자는 고용보험의 재정 및 배분정책 등을 고려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② 다양하고 일시적인 가족돌봄 사유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 휴가제도의 신설, 장기간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현행 기간의 연장(공무원 가사휴직과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 참고), 돌봄 대상 범위 역시 공무원 가사휴직 기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나아가 현행 육아 지원 제도처럼 근로시간의 단축, 출퇴근 시간의 조정, 야근이나 연장, 휴일 근로의 제외, 업무 조정 등을 가족돌봄휴직에도 적용하여 사업주의 지원조치 의무를 강화함이 바람직하다.

④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30일 이내의 기간을 휴직 개시일로 지정하는 조항은 긴급한 필요성에 대처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휴직 불허 가능성의 예외 조항은 공무원 가사휴직의 경우처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의 유무를 불문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① 2005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및 구제 관련 실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차별 금지의 범주 및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담고 별도의 차별 판단 (시정)기구나 구제기관을 두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박선영 외, 2016b: 168-171).

② 「경범죄처벌법」 규정으로는 미온적인 사후적 대처 이외 스토킹 피해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박선영 외, 2016b: 172-179).

③ 그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화·전문화되어 왔으나 나아가 사건 대응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방 및 지원체계 간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박선영 외, 2016b: 179-181).

④ 또한 성별임금격차 축소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동 원칙의 판단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입법적 노력(박선영 외, 2016b: 181-184)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박선영 외, 2016b: 184-185).

⑤ 여성 대표성 확대 관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흡수 번호 의무화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여성 할당제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박선영 외, 2016b: 185-187). 이와 함께 여성 임원 할당제 등을 입법화하되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으로부터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선영 외, 2016b: 187-190).

⑥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관련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50~8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선영 외, 2016b: 190-193).

⑦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소외되는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박선영 외, 2016b: 224-228).

마. 5차년도(2017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2) 연구 목적

5차년도 연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후, 이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선영 외, 2017: 3).

3) 주요 연구 내용

고용차별을 철폐한 최초의 실체법으로서 1987년 제정 이후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친 「남녀고용평등법」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전후

여성노동 실태의 변화,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과 적용 현황 검토,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와 한계·대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외국의 남녀고용 평등 관련 법과 제도 조사·분석을 통해 살펴본 후, 이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4) 정책제언

① 고용상 성차별 규제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이행의 주체를 사업주에서 사용자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에 대한 임금(제8조), 임금 외의 금품 등(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제11조제1항) 규정에 대한 적용 제외를 삭제하여 법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객체를 ‘사업 내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행위자는 ‘사업주, 근로자, 고객 등 업무와 관련된 자’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적용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또 적용 대상 공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기업(149개)도 그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하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하도록 하고 다만 현행 사업주의 유급의무 규정은 존치하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OECD 평균 2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이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이 제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⑤ 분쟁해결 및 구제제도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 신청절차에 고용상 성차별 부분까지 포괄하여 노동위원회가 이를 전담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입증 책임 부담은 실제 소송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을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차별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고용평등 촉진 법제와 일·가정 양립 지원 법제를 분리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이 여성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근로자의 문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례의 경향은 일관성이 없고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상의 판단기준도 현실 적합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기업 내 승진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징계에 준하는 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고용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여성관리자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명예고용평등감독의 자격을 사업장 내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의 단독 해결이 어려운 고용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촉 대상을 '노사단체나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여성 위촉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6차년도(2018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 :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2) 연구 목적

6차년도 연구는 그동안 변화·발전되어 온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본 후에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선영 외, 2018: 3).

3) 주요 연구 내용

- ① 성 주류화 관련 법률의 제·개정 내용과 현행 법제의 주요 내용을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개괄한다.
- ② 성 주류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본다.
- ③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대상 FGI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 주류화 법제 전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와 과제 및 발전방안으로 중심으로 분석한다.
- ④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성인지 예산제도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 정책제언

- ①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즉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독립입법 추진에 따르는 시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고려할 때는 현행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②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제출 시한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에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한다(제7조)”고 의무화함으로써 두 제도 간의 연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을 위해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가 편제되어야 한다. 또한 성인지 예·결산 지원 기관의 법정화가 필요하고,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④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 7차년도(2019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I)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2) 연구 목적

7차년도 연구는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가운데에서도 법률혼 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승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가족을 둘러싼 법규범의 급진적인 변혁이 어려웠던 경험에 입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국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대응 가능한 방안부터 장기적으로 수용해야 할 방향의 모색까지 다차원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박복순 외, 2019: 4).

3) 주요 연구 내용

- ① 한국의 가족 변화 현상을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면서 현행 가족 규범과의 간극을 살펴본다.
- ② 일반 국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 ③ 비혼인 가족들이 직면하는 차별 실태를 드러내고, 그들이 겪는 차별 및 제도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FGI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④ 가족 또는 가족 유사 관계의 법적 포섭 범위와 관련한 해외의 사례를 혼인 외에 사실상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유형과 등록을 요건으로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정책제언

①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 규정은 「민법」 내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한 채 상징적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포섭과 배제의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건강가정기본법」의 역할은 이상적인 가족상을 두고 그로부터 벗어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상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원만한 가족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실혼에 대한 성립요건의 완화되어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관계 청산을 위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동반자의 유족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가칭)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칭)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의 정의 규정, 관계 성립과 해소를 위한 요건, 생활동반자 관계의 효력으로서 비재산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 관계 증명을 위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생활동반자와 가족법의 영역에서 친족 범위에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조정에 관한 내용들도 「민법」의 특례로서 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활동반자법에 규정된 생활동반자를 사회복지 관계법 상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아. 8차년도(2020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II) :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2) 연구 목적

8차년도 연구는 정치관계법제 중 의회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공천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 여성공직자후보추천금 등의 제도가 여성 정치 대표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정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남성과 거대정당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등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선영 외, 2020: 5).

3) 주요 연구 내용

①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의 도입과 발전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②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화 유형을 법적 제도화와 정당제도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③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이 여성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친 변화 및 영향을 분석한다.

④ 여성추천보조금과 여성정치발전비의 운영 현황 및 효과를 살펴본다.

⑤ 현행 선거제도와 공천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치대표성에 미친 영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자 FGI 및 개별 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분석한다.

⑥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4) 정책제언

① 지역구의원 여성공천할당제 강행 법규화 및 비율 확대 방안으로는 현행의 지역구의회 여성공천할당제를 “권고”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개정하고, 위반시 국가보조금 삭감 등 강제이행 조치 등을 법정화하고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비율을 확대한다. 둘째, 여성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할 경우,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당의 후보자 명단의 등록 무효화와 국고보조금 삭감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② 자치단체장선거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각 정당은 후보자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후보자명부 등록을 무효로 하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정당의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강제화와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필요하다.

③ 여성정치발전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를 「정치자금법」 제25조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정당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이를 감시할 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④ 여성정치대표성에 관한 정당의 책무 강화를 위한 여성의 선출직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후보자 대상의 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⑤ 선거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해서는 i)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와 국고보조금 지급이나 정치 참여 기회에 있어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차별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선거기탁금 인하 및 선거운동의 보장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구 중심의 선거운동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고, 정당가족 중심의 선거운동도 개선되어야 한다. 호별방문 선거운동 도입은 검토가 필요하다.

⑥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후보자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게 되는 성적 괴롭힘과 폭력 등을 금지하고 방지의무 등을 규율해야 한다.

자. 9차년도(2021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X)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 연구 목적

9차년도 연구는 여성가족부 출범 20년을 맞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한계, 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발전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박선영 외, 2021: 5).

3) 주요 연구 내용

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 출범 20년의 성과·한계·과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과정과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여성가족부 출범 20년의 성과, 한계, 과제를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일반적 현황, 조직 형태, 기구 명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둘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각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변천과정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와 중앙-지방 간 연계 방식을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③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 지형의 변화된 환경을 진단하고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기반한 여성가족부 SWOT 분석을 한 후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향, 발전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4) 정책제언

①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i)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와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등의 차별시정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여성가족부가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 여성가족부의 여성노동정책은 소관 법률의 한계로 인해 여성 일반에 대한 여성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어렵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접근도 어렵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돌봄 등 생활 전반을 고려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불평등과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책임 주체는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ii) 여성건강정책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건강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iv)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되어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권한 확대를 통해 부처별 성 주류화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성평등 정책 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정책의 성평등 통합 기능과 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차. 10차년도(2022년)

1) 세부 연구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X) : 헌법의 성인지적 개정 방안

2) 연구 목적

10차년도 연구는 성인지 헌법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1987년 제9차 개헌으로부터 35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 사회의 젠더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헌법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구 내용

① 이론적 배경으로서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젠더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성평등 정책의 변화를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변화와 발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② 우리 헌법 전문, 총강의 구조 및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의 연혁을 살펴본 후에 헌법 개정안으로 제안된 내용 중 성평등과 가족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③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헌법상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을 전문가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④ 외국의 헌법상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및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조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일반적 평등조항으로 성평등을 보장하는 유형과 성평등에 관한 독립규정을 둔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영역별 성평등 조항에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정치 영역과 경제·사회·문화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한다. 특히 정치영역은 동수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생산 등 새롭게 대두되는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들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⑤ 이상의 연구 결과에 터잡아 성인지적 헌법 개정 방안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헌법상의 젠더 관련 규정을 전문(前文), 성평등 규정 관련 조항과 가족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헌법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⑥ 부록에서는 10년간 진행된 본 연구사업의 내용과 성과 등을 정리한다.

4) 정책제언

성인지적 헌법 개정방안으로는 i) 헌법 전문(前文)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으로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원리 등이 기술되어 있다. 헌법 전문 개정이 헌법 조항의 개정과는 달리 우리 헌법 정신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 계기를 담을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돌봄”의 가치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돌봄은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건강한 구성원을 길러내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삶에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일로 출산·양육, 교육, 의료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보는 보편적 경험을 통해 인간은 인간으로 형성되고,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돌봄을 개인과 국가, 사회가 추구하고 수호해야 하는 가치로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헌법의 인간상과 돌봄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국가 공동체의 이념적 가치체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ii) 평등권에 남녀 ‘동등’ 참여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근래 성인지적 헌법례로는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분리되는 것으로서 성별 간 ‘동등(parité 또는 paridad)’이 새롭게 대두하였다. 성별 간 동등의 개념은 초기에는 선출직 정치영역에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할당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현존하는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구제, 즉 불평등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성평등에 관한 비전을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새롭게 정의하거나 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적 대표성,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 관점을 모두 통합하여 녹여낼 필요가 있고, 성평등 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모든 정책의 수준 및 단계에서 성별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관점 역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동등한 참여’ 조항은 영역을 불문하고 통합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iii) 여성 근로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더불어 제헌헌법부터 보장되어 왔다. 제헌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기준의 법정주의를 명시한 제17조에 여자의 근로가 소년의 근로와 함께 묶여서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서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를 구분하였고, 여자의 근로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특별한 보호’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력의 기준이 되는 남성의 그것과 다를 뿐 아니라 거기에 미달하는 노동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외국 헌법의 경우에는 노동영역에서의 성평등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별임금

격차,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의 한국적 특징과 외국헌법례를 참조할 때 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성의 근로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성과 재생산권이 신설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7~2018년 헌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고, 본격적으로는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것이다. 현행헌법에서 재생산 관련 권리는 제10조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자기 결정권, 제36조제2항 모성의 보호, 제32조제4항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차별금지, 건강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6조제2항은 재생산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임신, 출산, 수유,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제시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모성’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재생산권을 모성보호, 즉 임신과 출산, 수유, 더 넓게는 양육 등에 대한 보호로 한정하여 재생산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영역을 포섭하지 못한다. 재생산이 권리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모성보호’에 머물고 있는 헌법의 한계, 재생산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헌법례 등을 통해 볼 때 우리 헌법에서도 성과 재생산권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재생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인지 사회권적 기본권인지 명확하지 않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성질을 둘 중 하나로 가르는 것이 권리의 실효적 보장에 적합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재생산 기본권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 형태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v)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9차 헌법개정 이후 여성·가족 관련 법제 중 젠더기반폭력 분야는 가장 많은 입법적 변화가 이루어진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 헌법 개정 논의 과정, 특히 새로운 기본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젠더기반 폭력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법제에도 불구하고 젠더기반 폭력은 온존하며, 오히려 불법촬영 및 유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으로 젠더기반폭력의 양상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이 다른 어떠한 사안에서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요하고, 이에 개입할 국가의 적극적 보호 및 조치의무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에 독립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vi) 가족 관련 조항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을 명시한 규정은 제36조 제1항이 유일하다. 이 조항은 기본권이 있음을 직접 규정한 형태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를 위한 제도의 국가적 보장과 그 원리를 규정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과 별개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 즉 가족 구성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인권규범 및 여러 국가에서는 혼인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분리해서 명시해 왔다. 종래 혼인과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진다고 보았던 가족구성권은 이제는 혼인할 권리와 분리되는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2019년 쿠바 헌법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혼인과 별도로 명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다고 함으로써 가족구성과 형태의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혼인과의 유기적 관련성 하에 해석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규정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가. 성과

본 연구는 여성의 삶과 여성·가족 관련 법률과의 괴리에 주목하여, 여성·가족 관련 법률 내용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성별 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는 없는지를 검토하여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0년간 여성·가족 관련 법률 중 주요 법률을 대상으로 심층분석과 관련 의제에 대한 국민인식 및 요구 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그 결과의 공론화를 위해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다수의 제정법과 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실적

연구결과의 공론화를 위해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다수의 제정법과 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표 2〉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실적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3년 제1차
주제: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일시 및 장소: 2013년 3월 22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주최: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2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3년 제2차
주제: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컨퍼런스 일시 및 장소: 2013년 6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김춘진 국회의원, 민현주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3년 제3차
주제: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법과 정책의 정비방향 한일국제컨퍼런스 일시 및 장소: 2013년 9월 1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4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3년 제4차
주제: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방안 일시 및 장소: 2013년 11월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주최: 이자스민 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제5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3년 제5차
주제: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노동문제와 입법·정책의 과제 일시 및 장소: 2013년 12월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6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3년 제6차
주제: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방안 일시 및 장소: 2013년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현숙 국회의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7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4년 제1차
주제: 젠더와 사회보험 일시: 2014년 4월 2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제8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4년 제2차
주제: 통일·사회통합과정에서의 젠더법 정책 일시: 2014년 6월 2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제9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4년 제3차
주제: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일시: 2014년 7월 5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10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4년 제4차
주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시: 2014년 7월 10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제11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4년 제5차
주제: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체계 일시: 2014년 12월 20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12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5년 제1차
주제: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 일시: 2015년 4월 29일 주최: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3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5년 제2차
주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일시: 2015년 7월 24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후원: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4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5년 제3차
주제: 사회보장과 젠더 일시: 2015년 12월 28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5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6년 제1차
주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일시: 2016년 7월 7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6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6년 제2차
주제: 한·독·일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실태 및 법과 제도 국제컨퍼런스 일시: 2016년 9월 22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임이자·정춘숙·김삼화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7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6년 제3차
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일시: 2016년 12월 1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8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7년 제1차
주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 일시: 2017년 6월 1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윤종필·신용현·박인숙,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7년 제2차
주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일시: 2017년 11월 9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한정애·임이자·김삼화·이정미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8년 제1차
주제: #미투 입법 과제 일시: 2018년 5월 1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윤종필·신용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1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8년 제2차
주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의 있습니다" 일시: 2018년 7월 3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전화, 국회의원 남인순·정춘숙·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2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8년 제3차
주제: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와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포섭 일시: 2018년 9월 20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상희·남인순·정춘숙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3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8년 제4차
주제: 한국과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과제 일시: 2018년 12월 4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9년 제1차
주제: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평가와 과제 일시: 2019년 2월 18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제25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9년 제2차
주제: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 일시: 2019년 10월 12일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주관: 한국젠더법학회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9년 제3차
주제: 변화하는 가족과 법 일시: 2019년 12월 19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27차 젠더와 입법포럼	2020년 제1차
주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모색 라운드테이블 일시: 2020년 4월 13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제28차 젠더와 입법포럼	2020년 제2차
주제: 21대 총선 평가-아직도 먼 길 남녀동수 일시: 2020년 4월 23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제29차 젠더와 입법포럼	2020년 제3차
주제: 20대 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성과 및 21대 국회 입법과제 일시: 2020년 12월 17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재(국민의힘) ※ 코로나19로 개최 취소	
제30차 젠더와 입법포럼	2020년 제4차
주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19 이후, 여성노동의 변화와 법적 과제 일시: 2020년 12월 19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31차 젠더와 입법포럼	2021년 제1차
주제: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방안 일시: 2021년 9월 9일 온라인 (Zoom 접속)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2021년 제2차
주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일시: 2021년 11월 23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제33차 젠더와 입법포럼	2022년 제1차
주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의의와 과제들 일시: 2022년 7월 13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34차 젠더와 입법포럼	2022년 제2차
주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10년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일시: 2022년 11월 29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여성·가족 관련 제정 성과

우선, 제정법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안을 성안하여 제시하였고, 그 내용이 반영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법안도 성안하여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의 발의로 동법이 제정되는데 기여하였다. 2015년 입법과제에 포함된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은 2021년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법 제안은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차별 금지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차별금지법 제정법안 제시는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8.3.13.), 성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18.3.26.),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019.3.25.)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어 아직까지 입법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 여성·가족 관련 법률 개정 성과

이 연구를 통해 입법과제로 제시되어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 노동 관련해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조항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조항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조항 개정 및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개정(「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의무의 강행규정화 및 보호 조치 세분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 추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제2호),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 의무 추가(「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모집·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부터 제29조의7까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 정비(「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난임치료 휴가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2),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에 남녀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이 포함되었다.

가족과 돌봄 관련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 개선되었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조항 신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조항 신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조항 신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21조의5), 아이돌봄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조항 신설(「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 등이 있다.

성 주류화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신설(「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 정부는 예산 편성 또는 집행 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 하였고,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 제정, 2021.1. 시행)이 제정되었다. 또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제안되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2호)이 신설되었고,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도 신설되었다.

〈표 3〉 여성·가족 관련 법률 제·개정 성과

연구 내용	입법 성과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도입(「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제2호) •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 신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조항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 개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 여성발전기본법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2014. 5. 28. 법률 제12698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1. 6. 15. 법률 제18285호)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조항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조항 신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1. 4. 20. 법률 제18083호)

연구 내용	입법 성과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항)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조항 개정 및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개정(「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의무의 강행규정화 및 보호 조치 세분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 아이돌보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조항 신설(「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 추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제2호) ·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조항 신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조항 신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21조의5)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 의무 추가(「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 모집·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부터 제29조의7까지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 정비(「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 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 신설) · 난임치료 휴가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2)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 · 정부 예산 편성 또는 집행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포함하도록 규정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 제정, 2021.1. 시행)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한편, 간통죄와 낙태 규제에 관해서는 현행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법제와의 비교분석, 그리고 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그 위헌성을 주장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2015년에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가 되었고,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데 기여하였다.

〈표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미친 영향

연구 내용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3년)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2019.4.11. 선고 2017헌바127결정)
간통죄에 대한 심층 분석 (2014년)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간통죄 폐지(헌법재판소2015.2.26. 선고 2009헌바17등 전원재판부 결정)

5) 여성·가족 관련 법률 개정안 지원 성과

제·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입법안을 성안하고 입법과정을 지원한 법률로는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8.3.13.), 성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18.3.26.),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019.3.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017.1.23.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7.3.3.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등이 있다.

〈표 5〉 여성·가족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 성과

연구내용	국회 입법 지원(제/개정안 발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8.3.13.) 성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18.3.26.)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019.3.25.)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7.3.3.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등 다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2017.1.25.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저임금의 하한을 두어 생활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17.1.23.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

나.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10년 간 여성·가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일조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법과 현실과의 격차 또는 괴리는 법의 숙명과도 같은 것으로 법 적용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법이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일정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성평등 정책연구 전문기관인 본원의 법제 연구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향후 과제를 같음하고자 한다.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획된 연구과제가 일정 기간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된 계속 연구를 통해 연구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이런 안정성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충실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본원의 위상과 전문성, 정책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의제별로 법제도를 접근하기보다는 여성·가족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 법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입법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중 법 제정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본원이 2019년 수시 과제로 수행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당시와 다른 입법환경의 변화를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 결혼과 취업인식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본 후에 이 법의 입법 연혁과 법체계, 법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 법의 규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업을 통해 전부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2014.5.28.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2011.9.15.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 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2.3. 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12.31. 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6.11. 제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2018.12.24. 제정), 「건강가정기본법」(2004.2.9. 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12.14. 제정),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2.8. 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3.24. 제정),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12.14.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1989.4.1. 제정) 등에 대한 입법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관련 법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토론문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토론문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토론문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문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문

한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